

#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7월 출범 통합특별시 조직 확대

##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개편 기획·재난안전 등 직급 조정...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돼 기획재정안전 등 지위부 직급이 격상되고, 행정수요에 대응해 기존 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광주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기 위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구 및 직

급 기준을 구체화해 출범 직후부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우선 광주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의 필요성과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수준, 커진 행정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행정기구별 직급 및 정수 기준을 개편했다.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통합 이후 넓어질 관할 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

·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 이후 업무량 확대와 사무의 광역화, 집행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의회 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 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장으로 조정했다.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감사위원장 역시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 대우 예정)으로 규정하였다.

또 광주특별시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주특별시가 초기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되며,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 반영하고, 기존 전라도 및 광주광역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

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으려면 광주특별시의 성공이 절실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광주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2026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7일 광주 북구 전대사대부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위장전입’ 광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재검토 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사업 판단키로

검찰이 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하면서 광주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기소함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찰이 송치한 12명 가운데 위장전입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8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4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에 처분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최소 신청 자격요건(50%)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당초 88세대 중 절반이 넘는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검경 수사로 사업에 동의한 48세대 중 12세대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36세대만 동의(40%)한 셈이 돼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후보지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 검토 등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을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어오다가 위장 전입 등 드러나자 지난해 9월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자격상실 여부를 논의한 후 재공모나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영암~광주 초고속도로·AI조선소 등 국고 확보 총력

### 전남도, 재정협의회의 핵심 현안사업 적극적 지원 건의 신규 153건 5537억원 발굴...8월까지 기획처·국회 대응

전남도가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해양물류 기반 구축 등 핵심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정당국 설득에 나섰다.

도는 지난 6일 전남 현장을 방문한 조영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 이어, 7일 세종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의 필요성과 국비 반영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전남도 관계부서 실·국장 이 참석해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담당 국장들에게 전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

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먼저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에너지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영암~진도 고속도로’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했다.

두 사업은 전남 서남권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기반시설로, 전남도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단지 공동

접속설비 구축사업’(잠정 1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와 함께 2027년 설계비 등 국비 493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농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청년농 유입을 돕기 위해 ‘벼 재배농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공공비축미 수매액의 10%를 국비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2027년 사업비 306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선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자율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잠정 총사업비 3천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제조 공정

에 접목해 조선소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27년 핵심 기술개발비 1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해양물류 분야에선 여수·광양항을 북극해 자원 운송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을 건의했다.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이 사업과 관련해 2027년 시범운항 인센티브 50억원 반영을 요청하며 신해양 시대 선점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신규 사업 153건(5537억원)을 발굴하고 사업 논리 개발을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중앙부처를 설득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8월까지 지휘부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한덕수 2심 징역 15년 1심 보다 8년 줄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서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업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연협뉴스

### 특별시 산업기반 시험대...정부, 7월 최종 선정 예정

▶1면에서 광융합산업 집적단지들 기반으로 국방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반도체와 연계된 센서, 화학합물 반도체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앞서 2025년 12월에는 산·학·연 전략회의를 열어 산업 육성 방향을 구체화했다.

2013년 유치한 광주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국방시장 진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우주항공과 소재부품 산업을 결합한 ‘우주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고흥군 중심으로 한 방사체 산업과 순천의 첨단 소재부

품 산업을 연계해 우주 기반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한 방사체인 프라와 소재부품 기업 집적지를 연결하면 우주방사체와 저궤도 위성, 첨단 소재를 아우르는 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3월 순천시와 고흥군을 비롯해 순천대, 전남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모 대응 체계를 갖췄다. 전남도가 제시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국비 245억원을 포함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추진된다. 고흥군과 순천시를 중심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방산 특화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된다. 방산 특화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고 우주항공과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창업과 기업 성장을 연계하는 구조를 갖춘 계획이다. 전남대와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와 저궤도 위성, 첨단 소재를 특화 영역으로 설정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발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우주·방산·소재를 연결하는 융합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클러스터 공모 신청은 지난 3월 30일 사업계획서 제출로 마무리됐으며, 이달 중 발표 평가를 앞두고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주산업과 소재부품 산업을 결합한 구조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며 “남은 절차에 대응해 우주 방위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 5·18 46주년 기념행사로 오월 정신 잇는다 15일 도청 기념식·16일 나주시 남도 오월 문화제

전남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위원장 양관석)는 7월 5·18 민주화운동 제 46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로 계승하는 데 중점을 뒀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이어 16일 오후 1시부터는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남도 오월 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이 참여해 오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인다.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위원회는 5·18 악화와 사회전을 비롯해 △민주영화제 전국 5·18 축구대회 △오월 주먹밥 나눔 △민주시민 역사기행 등 전남 곳곳에서 오월 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미래세대 참여 프로그램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춘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5·18 사적지 답사와 민주역사 교육을 추진하고, K-POP 댄스와 스텔벤드 공연 등이 어우러진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교육감·무소속 후보 추천장 9일부터 교부

#### 광주시선관위, 지선·보선 출마 예정자 대상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15일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검인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선거에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출마자나,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가능하다.

선거법 법정 추천인 수는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 1000~20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300~500명, 자치구·시·군 의장 선거와 지역구 통합특별시의원 선거 100~200명,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50~100명 등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남·광주인의 자치구·시·군 3분의 1 이상에서 각 자치구·시·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 이상씩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인구 1000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는 30~50명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